병역거부 대체복무 '현역의 2배'

국방부, 36개월 · 교도소 근무 정부안 최종 확정… 내년 1월 입법예고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재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20일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부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 안과 36개월 안을 두고 고심했으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도소(교정시설)로 정했다.

일부 지뢰탐지 등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고,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복무분야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 교정시설로 단일화 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하면 소방서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마련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 적정 복무기간에 대해 일반인과 현역병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위원 투표로 결정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법무부)이 관리·감독하고,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따라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6번째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한다.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남북도로 개설현장 둘러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GP 방문 후 남북도로 개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3일 2019년 신년 인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이 2019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지난 28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2019 든든한 민생, 새로운 평화, 준비된 전북도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사회는 1월 3일 오후 1시30분,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 그랜드 벨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인사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원 500여명이 초청돼 식전 공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의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평화당 전북도당, 2일 신년 합동 시무식 참석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소속 국회의원 및 핵심당직자 50여명은 1월 2일 오전 9시 민주평화당 중앙당이 주최하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와 신년 합동 시무식에 참석한다.

당초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월 2일 10시 관내 임실호국원을 참배하고 11시 핵심당지자 단배식을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가질 계획이었으나 중앙당으로부터 같은 날 "전 당원 광주 5.18 민주묘역 합동참배 및 시무식"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중앙당 행사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정읍〉
상교동 350000

〈부안〉
동진면 신리마을 200000
동진면 오중마을 160000
동진면 팔왕마을 200000
동진면 중동마을 150000
동진면 반곡2마을 150000
동진면 반곡1마을 150000
동진면 익상마을 300000
동진면 제내마을 200000
백산면 대수마을 220000

〈12월 31일자〉

훼손된 갯벌 관리 체계화

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갯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하여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며, 수산물의 중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갯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1987년 이후 간척·매립 등으로 갯벌면적이 716㎢ 감소되어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갯벌법은 총 7장 44개 조문과 부칙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모든 갯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 체계적 보전을 도모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갯벌의 관리나 이용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유입방지나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제거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즉각 투입하고, 갯벌 이용 현황 및 오염원 조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처럼, 대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수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청정 갯벌을 명품 갯벌로 개발하고, 지역수산물 판매에 있어 지역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갯벌 인접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갯벌 속에서 폐통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해양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훼손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갯벌생태계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갯벌 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정 의원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밥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